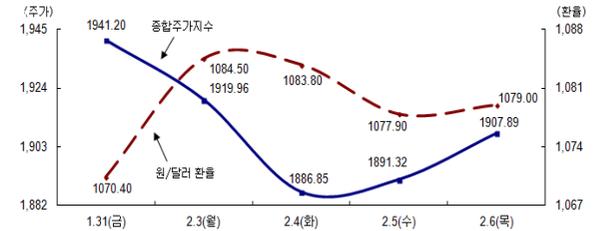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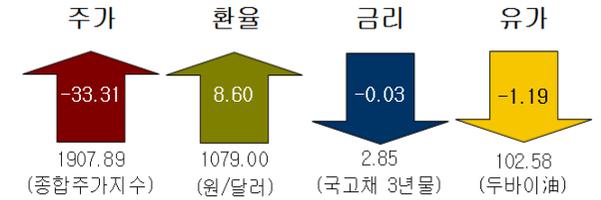
-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 고소득층 지갑 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31~2.6)

Better than
the Best!



※ 1/31(금)의 종합주가지수는 1월 30일의 종합주가지수를 참고함.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 고소득층 지갑 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 고소득층 지갑 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소비부진과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소비의 중요성) 민간 소비는 GDP의 과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19.0명/10억원)가 매우 크다.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

(고소득층 소비부진) 그런데 최근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12년 고소득층의 월평균 실질가처분소득이 587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66만 원에 비해 9배 이상 높다. 반면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23만 원으로 저소득층 90만 원의 3.6배에 불과하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년~2012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소득계층별 소비여력을 살펴보고, 고소득층의 소비의 특징과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소득계층별 소비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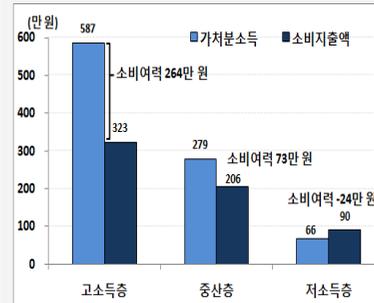
(계층별 소득)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538만 원에서 2012년 587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였다. 중산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6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69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했다. 소득 구성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산층은 자영업자의 감소했으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계층별 소비지출과 소비여력)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06년 310만 원에서 2012년 323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산층은 196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91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계층별 소비여력(가구별 실질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은 2006년 월평균 228만 원에서 2012년 264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59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월평균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은 노후준비나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소비여력이 미약하고,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전무한 상황인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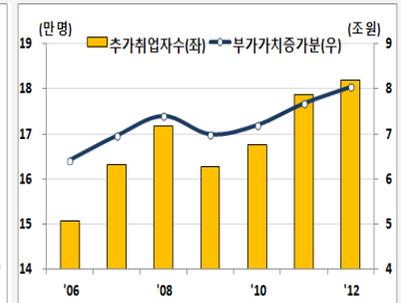
■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고소득층 소비가 확대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추정해 보았다. 경제효과 추정을 위해 먼저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여력 가운데 10%를 더 소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기초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고소득층의 추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만 추가 소비 되어도 신규 일자리는 연간 16.8만 명, 국내 GDP는 연평균 약 7.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2012)>



<고소득층 소비확대 시 경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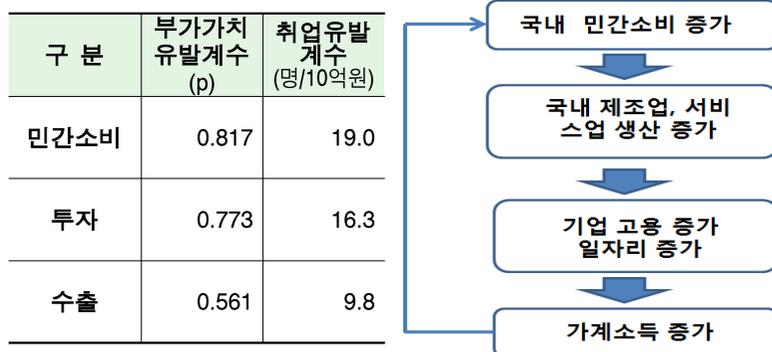
■ 시사점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먼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산층의 경우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 고소득층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소득층 해외 관광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무주택 고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소득층에게 맞는 문화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이벤트와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문화 소비 지출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최근 발표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고소득층의 서비스 관련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여 내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 소비 부진과 계층별 소비지출

- (소비의 중요성) 국내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국내 실질 민간소비는 2013년 현재 약 57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1,135조 원)에서 약 50.6%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경제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음¹⁾
 -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민간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7로서 가장 높고, 이는 10억 원 소비 증가하면 8.2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겨난다는 의미
 - 민간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9.0명/10억 원으로 역시 다른 항목보다 높으며, 이는 소비가 10억 원 증가할 때 약 19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임
 - 국내 민간소비가 증가하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따라서 소비의 확대는 결국 가계 소득과 기업의 이윤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부 세수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성장에 필수적임

<최중요항목별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 <국내 민간소비 증가와 국내 경제의 선순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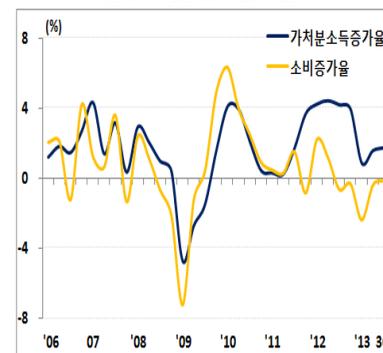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2009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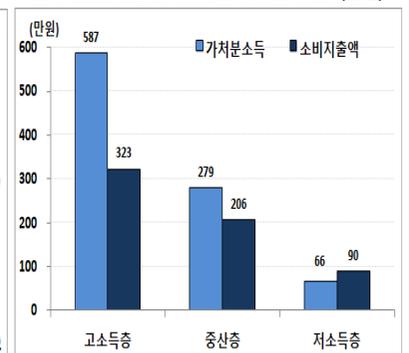
- (고소득층 소비 부진) 최근 가계의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
 - 최근 가계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음
 - 2011년 이전에는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계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
 - 소득증가율은 2012~2013년에 2~4%내외의 증가율을 지속한 반면, 소비증가율은 최근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다른 계층과의 격차가 매우 크지만, 소비지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음
 - 2012년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587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66만 원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반면,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23만 원으로 저소득층 90만 원의 3.6배에 불과
 - 본고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소비여력을 분석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구조 및 소비 증가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는 국내 생산과 일자리의 증가 및 소득 증가를 가져와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가처분소득 및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소득과 소비는 실질 기준.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201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전국 1인 이상 비농가 기준(이하 동일).

2. 소득계층별 소비여력

○ (소득계층 현황) 고소득층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증가

- **소득계층 정의** : 정부 및 OECD와 동일하게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기준으로 소득계층 분류
 - 중산층이란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저소득층은 50% 미만에 속하는 계층을, 고소득층은 150% 이상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
- **소득계층별 가구 현황** : 고소득층 가구 비중은 20% 내외, 중산층은 60%중반 내외, 저소득층은 20% 내외를 나타냄
 - 고소득층 가구의 비중은 2006년 19.5%(287만 가구)에서 2012년 18.5%(303만 가구)로 감소
 - 중산층 가구비중은 62%(911만 가구)에서 61%(1,002만 가구)로 감소
 - 반면 저소득층은 2006년 가구 비중이 18.5%(272만 가구)에서 2012년 20.5%(337만 가구)로 증가

※ 소비여력 : '소비여력'이란 가구별 실질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의미

- 가처분소득이란 경상소득에서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소득으로서, 해당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으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 본고에서는 소비지물가지수(2010=100)를 고려하여 실질화한 실질 가처분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을 사용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과 인구 비중 추이 >

구분	2006년				2012년			
	가구수 (만 가구)	가구비중 (%)	인구수 (만 명)	인구비중 (%)	가구수 (만 가구)	가구비중 (%)	인구수 (만 명)	인구비중 (%)
고소득층	287	19.5	883	20.4	303	18.5	916	19.8
중산층	911	62.0	2,481	65.7	1,002	61.0	3,055	66.1
저소득층	272	18.5	598	13.8	337	20.5	648	14.0
전체	1,470	100.0	4,322	100.0	1,642	100.0	4,6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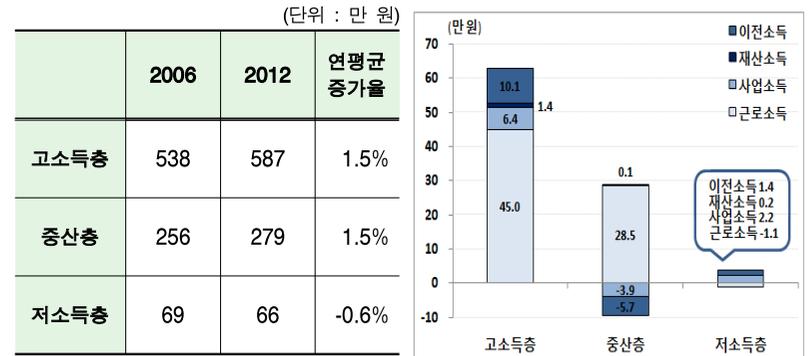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자체 추산.

주 : 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2006년부터 제공되므로 2006년부터 분석.

○ (계층별 소득)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

- **가처분소득** :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538만 원에서 2012년 587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
 - 중산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256만 원에서 2012년 279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였음
 - 반면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69만 원에서 2012년 66만 원으로 연평균 -0.6% 감소
- **소득 구성별 증감액** :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산층은 사업소득이 감소했으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
 - 고소득층은 경상소득이 총 62.9만 원 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이 월평균 45만 원 증가
 - 중산층도 총 19만 원 증가분 중 근로소득이 28.5만 원 증가. 반면 내수 부진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소득이 3.9만 원 감소
 -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이 2.7만 원 증가한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 여건 악화 등으로 근로소득은 1.1만 원 감소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추이>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별 증감 (2006~201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경상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등 공적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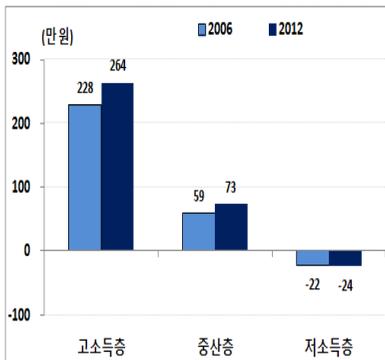
○ (계층별 소비지출과 소비여력)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큰 상태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은 상대적으로 미약

- 소비지출 :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미약하고,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이 감소세를 나타냄
 -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은 2006년 310만 원에서 2012년 323만 원으로 연평균 0.7%로 증가
 - 중산층의 소비지출도 2006년 196만 원에서 2012년 206만 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은 91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연평균 -0.2% 감소
- 소비여력 :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여력이 큰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소비여력이 미미하고,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부족한 상태
 -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은 2006년 월평균 228만 원에서 2012년 264만 원으로 36만 원 증가
 -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동기간 월평균 59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14만 원 증가했으나, 주택대출 이자비용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및 보험료 지출 등을 고려할 때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저소득층의 경우 동기간 소비여력이 월평균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적자가구 비중도 높아 추가적인 소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 원)

	2006	2012	연평균 증감률
고소득층	310	323	0.7%
중산층	196	206	0.8%
저소득층	91	90	-0.2%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여력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소비여력은 가구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임.

3. 고소득층 소비의 특징과 소비확대 시 경제효과

■ 고소득층 소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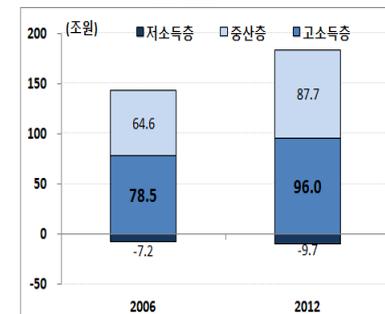
○ (고소득층 소비의 중요성)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가 필요

- 2012년 고소득층 가구 비중은 18.5%(총 1,642만 가구 중 303만 가구)에 불과하나 소비여력은 55.2%(총 174조 원 중 96조 원)에 달함
- 2012년 고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구당 소비여력은 264만원인데 반해, 중산층의 월평균 가구당 소비여력은 고소득층의 약 1/4 수준인 73만원에 불과
- 따라서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 고소득층 소비지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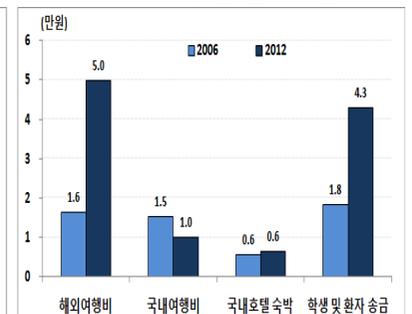
○ (해외지출 증가) 고소득층의 해외 단체여행 및 해외송금 급증

- 고소득층의 해외 단체여행 지출은 2006년 월평균 1.6만 원에서 2012년 월평균 5.0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단체여행 지출은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소
- 특히 고소득층이 지출한 국내 호텔·숙박비용은 2006년과 2012년 모두 월평균 0.6만 원으로 고소득층의 국내 여행 관련 지출이 상당히 부진함을 시사
- 해외 유학 및 의료서비스 관련 지출도 크게 증가
- 해외 유학생이나 환자에 대한 송금액이 같은 기간 1.8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급증
- 이는 고소득층이 해외 관광을 국내 관광보다 선호하고, 유학이나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계층별 연간 소비여력>



<고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해외지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해당 항목의 소비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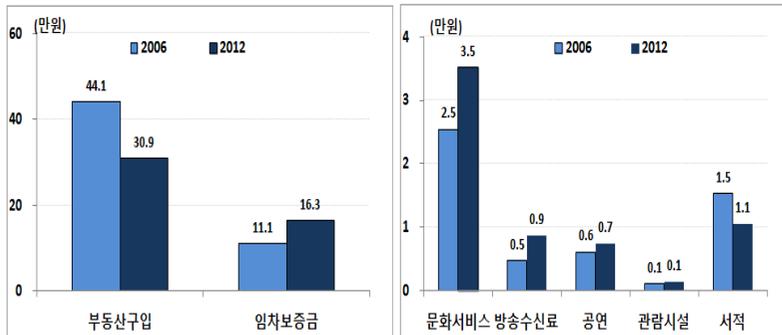
○ (주택 구입 지출 감소)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월세 지출은 증가

- 고소득층의 주택·토지 구입 지출은 2006년 월평균 44.1만 원에서 2012년 30.9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월세 임차 보증금 지급은 월평균 11.1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증가
- 2012년 현재 총 303만 가구 중 약 54만 가구(17.9%)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임
- 주택 구입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소득층이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대신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서비스 지출 부진) 고소득층 문화서비스 지출의 경우, 방송 수신료만 증가하고 문화 관람 시설이나 독서 관련 지출은 부진

- 고소득층 가구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006년 월평균 2.5만 원에서 2012년 3.5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방송수신료외의 문화 관련 지출은 부진
- 방송수신료는 2006년 월평균 0.5만 원에서 2012년 0.9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반면 공연이나 극장 이용에 따른 지출은 동기간 0.6만 원에서 0.7만 원, 관람시설 이용은 모두 0.1만 원으로 동일하여 소비 지출이 부진
- 한편 도서비 지출은 2006년 월평균 1.5만 원에서 2012년 1.1만 원으로 감소
- 이는 고소득층이 향유할 편리한 문화 시설이나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데 기인하며, 책 읽는 문화도 점차 퇴색되기 때문으로 보임

<고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주택 구입 지출> <고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문화 관련 지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해당 항목의 소비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화하였음.

■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

○ (경제효과 추정)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더 소비할 경우 신규 일자리는 연간 16.8만 명, 국내 GDP는 연평균 약 7.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정 : 고소득층 소비여력의 10%를 더 소비했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와 실질 부가가치를 추정

- 만약 2006년 이후 매년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가운데 10%를 더 소비했다면 늘어났을 소비 증가액을 연도별로 계산
- 각 년도에 고소득층 추가소비액에 각 년도 민간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 시 발생하는 고용 및 GDP 증대 효과를 추정 (자세한 추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
- 예를 들어, 2012년 고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소비여력은 264만원이며 이중 10%를 더 소비하면 26.4만원을 추가소비액으로 가정
- 월평균 추가소비액을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시 고소득층 가구 수를 곱해주면 2012년 추가소비액은 약 9.6조원

< 고소득층 가구당 월소비여력과 연간 추가소비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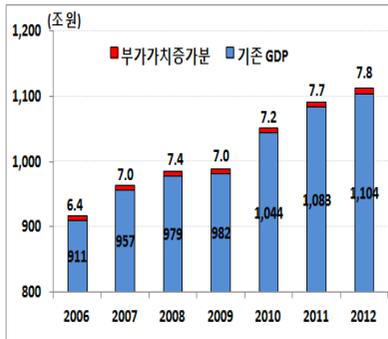
구분	가구수 (A,만 가구)	가구당 월소비여력 (B, 만 원)	가구당 월추가소비액 (C=B×0.1, 만 원)	연간 추가소비액* (D=(C×12)×A, 십억 원)
2006	287	228	22.8	7,847
2007	305	233	23.3	8,548
2008	306	246	24.6	9,045
2009	310	230	23.0	8,566
2010	312	235	23.5	8,816
2011	311	252	25.2	9,409
2012	303	264	26.4	9,596
평균	304	241	24.1	8,83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1) 연간 추가소비액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비여력 중 10%를 더 소비한다는 가정 하에 월 추가 소비여력을 연간기준으로 환산하고 다시 고소득층 가구 수를 곱하여 산출.
 2) 연간추가소비액은 가구수 만가구 이하, 소비여력 만원 이하 단위까지 포함되어 도표상의 직접적인 계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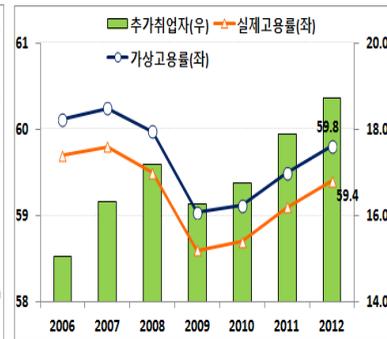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실질 GDP 증가 효과 : 2006~2012년에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추가 소비했을 경우 실질 GDP는 연평균 7.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앞선 가정에 따라 2006~2012년 동안 고소득층의 연간 추가소비액은 연평균 8.8조 원으로 추정
 - (연간 추가소비액 × 각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³⁾)를 적용하여 각 연도별 고소득층 추가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을 계산
 - 이상의 추정 결과 2006~2012년에 고소득층 소비여력 중 10%를 더 소비했다면 국내 실질 GDP는 연평균 7.2조 원 증가)
- **추가 고용 효과 : 2006~2012년에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경우 연평균 16.8만 명의 추가 고용 효과 발생**
 - (연간 추가소비액 × 각 연도별 취업유발계수⁵⁾)를 적용하여 각 연도별 고소득층의 추가소비에 따른 추가 취업자수를 계산
 - 이상의 추정에 따르면 2006~2012년에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더 소비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연평균 16.8만 개로 추정
 - 또한 이러한 추가 고용효과로 고용률(가상)은 2006~2012년 연평균 59.3%에서 연평균 59.7%로 0.4%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고소득층 소비 증가 시 실질GDP 증가 효과>



<고소득층 소비증가 시 추가 고용 효과>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자체 추산.
 주 : 고용률은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불변기준.
 4) 국내총생산(GDP)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므로, GDP의 증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연간 추가소비액이 투입될 경우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계산해야 함.
 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불변기준.

4. 시사점

-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소득을 증대해야 함**
 - 계층별 소비여력을 고려할 때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소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소비 확대가 필요하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현시점에서 소비를 늘릴 경제적 여유가 부족
 -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는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 증가를 낳고,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국민 소득이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중산층의 경우 소비여력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중산층은 월평균 70만원 내외의 소비여력을 갖고 있지만, 노후준비와 대출이자 상환 및 저축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소비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
 -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근로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증대
 - 한편, 지역 내 동종 업종 과밀화로 소득이 악화되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 창업 컨설팅은 물론 업종 전환 시 재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저소득층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대하여 안정된 소득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필요
 -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은 이미 과부족 상태이며, 부채나 이전소득에 의존하여 최저생계를 이어가는 가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근로능력이 구비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주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시험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
 -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채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각한 생활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

○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 등을 통해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
 - 고소득층의 해외관광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 외국 유학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송금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소득층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또한 낙후된 국내 관광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와 맛집, 전통 유적 등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국내 여행 편의를 개선
-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고소득층이 54만 가구에 달하므로, 이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
- 고소득층에게 맞는 문화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캠페인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문화 소비 지출 증대를 유도
 - 동시에 국내 명품 브랜드 개발을 확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 소비자들의 국내 소비를 유도
- 특히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고소득층의 서비스 관련 소비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상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소비 확대와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특히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융합과 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고소득층의 서비스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부록> 고소득층 소비증가에 따르는 GDP 증대 효과 및 고용 효과 분석

<고소득층 소비여력 10% 추가 소비 시 GDP 증대 효과 추정>

구분	실제GDP (십억 원)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가소비 시 부가가치 (십억 원)	가상GDP (십억 원)	부가가치 증감률 (%)
2006년	910,049	0.819	6,428	916,477	0.7
2007년	956,515	0.815	6,970	963,485	0.7
2008년	978,499	0.819	7,409	985,908	0.8
2009년	981,625	0.817	7,002	988,627	0.7
2010년	1,043,666	0.817	7,207	1,050,873	0.7
2011년	1,082,096	0.817	7,691	1,089,787	0.7
2012년	1,104,215	0.817	7,845	1,112,059	0.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 : 1) 전국(1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 2006년 이후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더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따른 연간 추가소비액을 추정하고 각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불변기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유발액을 계산.
 3) 불변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9년까지 제공되므로 이후에는 2009년 값을 그대로 적용.
 4) 부가가치증감률은 고소득층의 추가소비에 따라 늘어난 부가치를 더했을 때 기존 GDP대비 얼마나 GDP가 증가했는지를 추정.

<고소득층 소비여력 10% 추가 소비 시 추가 고용 효과 추정>

구분	생산가능 인구(만 명)	취업자수 (만 명)	취업유 발계수	추가소비 (십억 원)	추가취업 자(만 명)	실제 고용률 (%)	가상 고용률 (%)
2006년	3,876	2,315	19.2	7,847	15.1	59.7	60.1
2007년	3,917	2,343	19.1	8,548	16.3	59.8	60.2
2008년	3,960	2,358	19.0	9,045	17.2	59.5	60.0
2009년	4,009	2,351	19.0	8,566	16.3	58.6	59.0
2010년	4,059	2,383	19.0	8,816	16.8	58.7	59.1
2011년	4,105	2,424	19.0	9,409	17.9	59.1	59.5
2012년	4,158	2,468	19.0	9,596	18.2	59.4	59.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 : 1) 전국(1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 2006년 이후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를 추가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따른 연간 추가소비액을 추정하고 각 연도별 취업유발계수(불변기준)를 적용하여 추가 취업자수를 계산.
 3) 불변기준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까지 제공되므로 이후에는 2009년 값을 그대로 적용.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	1.0
일본	2.0	3.5	-2.0	-3.2	0.6	1.7	4.5	3.6	1.1	-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월 30일	2월 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0	2.70	0.0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3.40	101.53	-1.87%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654	1.3531	-0.0123%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5,849	15,629	-220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007	14,155	-85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8	2.85	-0.0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70.4	1,079.0	8.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41.2	1,907.9	-33.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월 30일	2월 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8.15	97.83	-0.32%
	Dubai	107.99	100.38	107.88	103.77	102.58	-1.19%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4.18	287.84	3.66%

주 :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